

국민연금, 말이 아닌 실질 개혁을

김 상 훈(동아일보 기자)

20층짜리 아파트 한 동이 있다. 층마다 24평형 아파트가 네 가구씩 입주해 있다. 로열층이나 아니냐에 따라 가격은 다르겠지만 평균 2억 5000만 원이라고 치자. 그러면 모두 80가구가 들어있는 이 아파트 한 동의 가격은 200억 원이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아파트 네 동을 매일 파괴하거나 없애버리고 있다. 320가구가 살 수 있는 터전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사라지는 ‘아파트’도 늘어난다. 이 돈은 연금개혁에 실패하면서 현 세대가 자식 세대에 떠넘기는 부채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매일 20층 아파트 네 동에 해당하는 800억 원의 부채를 자식들에게 넘기고 있다. 지금 이 상황 그대로라면 2030년이 됐을 때 자식세대가 우리 대신 갚아야 할 부채액은 1883조원으로 불어난다.

지금 마흔인 사람들은 20년 후에 그때까지 낸

만큼 연금으로 돌려받는다. 현재 계산법대로라면 낸 돈의 2.4배를 연금으로 받는다. 지금 스물인 사람들도 40년 후에 연금을 받는다(물론 연금수급개시연령이 늦춰지면 45년쯤 뒤에 받겠지만). 열 살인 아이들도 50년 후에 연금을 받는다. 다만 이들에게 연금을 내 주려면 지금 갓 성년이 된 20대나 10년 후 성년이 되는 10대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 9%인 보험료는 2050년 30%로 오르게 돼 있다. 100만 원을 벌면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3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후세대로 갈수록 우리 대신 갚아야 할 부채액과 보험료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말이 그저 엄살에 불과한 게 아니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겠는가?

벌써 몇 년째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공방’만 벌이고 있다. 아직 타협의 기미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혹시 여야가 정치적 득실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선뜻 개혁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바란다.

원래 여당과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2030년까지 15.9%로 높이고 40년 가입 기준으로 급여수준을 50% 정도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해, 65세 이상 노인과 '일정한 조건'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인에게는 매달 31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고 나머지 가입자는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내고 그만큼 받아가는 소득비례 연금을 주자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보험료를 7%로, 급여수준도 40% 수준으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2월말 국회연금 개혁특별위원회를 종결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안을 내놓았다. 수정된 정부안에는 보험료 인상폭을 12~13%까지 제한하고 급여수준을 한나라당의 주장과 같은 40%까지 낮추는 것으로 돼 있다. 또 한나라당의 기초연금과 비슷한 '기초노령연금제'도 제시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45%에게 매달 8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간 2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한나라당의 기초연금 제도를 일부 수용한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수정안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듯 하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55%가 반발이 심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의 수정안(복지부는 개혁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은 한나라당의 안과 흡사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여전히 다른 점이 많다. 따라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 전망이 적지 않다. 우선 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제는 기존의 경로 수당을 확대한, 일종의 공적 부조로 볼 수 있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논하기 전에 일단 이 제도는 연금체계의 틀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조세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이 더 크지, 결국 연금개혁과는 무관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는 현재의 연금구조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하고 있는 반면 새로운 정부안은 이런 구분을 하지 않은 과거의 정부안과 본질적으로는 같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수정안이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주무부처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어쨌든 연금 개혁 논의에 불을 지폈기 때문이다. 이제 정치권이 타협을 위한 테이블에 마주앉는 것만 남았다.

타협을 시작하려는 정치권에 국민들이 어떤 점을 바라고 있는지 알아둘 것을 권한다. 동아일보가 2월 국민연금 집중기획을 하면서 전문가를 상대로 심층 설문조사를 벌인 적이 있다. 당시 모든 전문가가 "연금개혁은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며 신뢰할만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전문가의 47.8%가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대해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층구조를 가장 선호했다. 또

39.1%가 '보험료 인상, 급여 수준 인하'를 꼽았다. 그 어떤 경우에도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지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개혁을 논할 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연금을 빼 놓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설문조사에서도 66.7%가 '동시에 개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무부처는 행정자치부이다. 따라서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동의하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은 '월권'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틀린 말은 아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자가 1조 원 정도이며 갈수록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15년 이내로 적자는 13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돈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이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대목이 있다. 상당수의 가입자, 즉 국민이 연금에 대해 신뢰보다는 불신을 하고 있

는 것이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복지부나 공단은 국민연금의 정확한 실체를 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1005만 명 중 440만 명이 국민연금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고도 '전국민연금'이라 부를 수 있을까?

어쨌든, 왜 그들은 국민연금을 외면할까? 그들은 "국민연금 가입해 봐야 손해다"라거나 "나중에 연금을 못 받을 텐데, 뭐 하러 가입을 하겠는가?"라고 대답한다. 불신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가입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연금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불만족'이 46.5%로 절반에 육박했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37.2%였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고작 16.3%에 그쳤다.

유시민 장관은 "연내에 어떻게든 국민연금 승부수를 띄우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장관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더 이상 개혁을 늦춰서는 안 된다. 그것도 말이 아닌, 실제 개혁이 되길 바란다. 우리의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려면 말이다.